

금강대 교직원 30% 해고… 내홍 장기화되나

금강대 1년간 전임교원 · 직원 17명 파면 · 해임

소청 · 노동위 징계 부당 판정
해고자들 “명분 없는 부당징계”
학교 측 “사유 분명, 소송 준비”
현 총장 사표… 신입총장 공모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천태종립 금강대가 지난 1년간 전임 교원과 정규직 직원들을 30%가량 해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의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 징계처분 취소와 복직을 명령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어서 학내 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중재해야 할 송희연 금강대 총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전임교원의 재임용탈락과 의원면직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치는 형국이다.

합의점 못 찾는 노사갈등

금강대의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 해임된 교직원은 전임교원 8명과 직원 9명 등 총 17명이다. 더불어 재임용 탈락 전임교원은 3명, 의원면직으로 학교를 떠난 전임교원은 5명이다. 교육부 ‘대학알리미’ 2019년 기준 전임교원 21명, 일반직 직원 28명이 재직 한 금강대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은 금강대 개교 초기부터 십수년간 교직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중심 인력의 이탈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임교원 징계에서는 불교문화연구소 소속 교수 5명에 대한 파면 · 해임이 가장 눈에 띈다. 이들은 금강대 인문한국(HK)지원사업 종료 후 전임교원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HK센터 복무규정에 적힌 ‘주중 전일제’를 이유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를

적용,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된 교수들은 “HK교수 임용계약서를 썼지만 HK지원사업이 종료된 후 HK센터 복무규정을 따를 이유가 없고, 교원인사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인사규정에는 교원의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고 HK교수를 포함한 연구전임교원과 강의전담교원 규정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된 교수들은 소청을 접수, 교원소청심사위는 1월 9일 학교 측의 파면 · 해임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불교문화연구소 교수 외에 일부 다른 교수들의 소청 또한 징계처분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교 측이 HK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재정적 한계를 느껴 의도적으로 연구진을 내보낸 것이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HK사업은 10년간 정부가 HK교수 임금을 지원하고,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대학이 정년 트랙 임용으로 각 교수들의 임금을 부담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HK사업을



수주한 대학들은 사업 종료 후 인건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금강대는 지난 2017년 8월 사업이 종료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근대문제 등 HK교수들의 계약사항에 따른 징계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그 외 다른 징계교수들 역시 분명한 사유가 있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총장마저 사임… 장기적 다름 전망

교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에 대한 대부분의 파면 · 해임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부당해고로 판단, 해직자들의 복직과 해고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주문했다. 학교 측은 이들이 언론과 천태종 말사 등에 배포한 보도자료 · 서신 등이 허위사실 및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직원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서신에는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조를 탄압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중앙노동위는 일부 부정적 표현이 대 학교 명예를 훼손한 것은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임총장들이 형사처벌 받은 점 등의 사례로 볼 때 직원들의 문제제기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학교 측은 소청심사위와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어서 장기적인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강대 관계자는 “학교의 징계가 과하다는 소청위와 노동위 판단을 불복하는 입장이다. 노동자 입장에선 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해석이 다르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인력공백은 추가적인 채용을 통해 해결 중이다.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송희연 총장은 얼마 전 사표를 제출, 오는 2월 말까지 근무한다. 송 총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2년간 총장 소임을 맡았지만 나이도 그렇고, 휴식이 필요했다.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금강대는 1월 15일 신입총장 초빙 공고를 내고, 29일까지 후보자를 접수한다.

“공원일몰제 대책, 녹지 편익주의”

조계종 종단지도자포럼서, 서울시 행정 지적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사유지 보상 대책 마련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의 대책이 녹지 편익주의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20 종단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중진 스님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이용남 실효대응팀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안내’라는 주제로 서울시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2181개의 도시공원이 조성돼 있다. 서울시 면적 605km²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이 팀장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효되면 사유지 폐쇄나 등산로 이용 제한 등으로 도시공원 출입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결국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낮아져 공원서비스의 질도 하락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모든 도시

공원 부지 매입을 천명한 상태. 이 팀장은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 예산과 지방채, 국비 등으로 보상을 완료할 것”이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기존 재산세 50% 감면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 설명에 스님들은 ‘녹지 편익주의’라고 지적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림이고 자연공원제도를 갖추고 있어 전국의 큰 면적이 녹지로 활용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도시공원만을 강조하며 일몰제 실효로 기후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토지는 국가소유지만 사찰이 점유하는 사례도 있다. 종교성은 검토하지 않고 일반과 종교를 동일선상에서 보면 그동안 사찰이 해온 역할은 차치한 채 강제수용 위기에 처한다”면서 “한편으론 녹지 우선주의나 편익주의로 보인다. 종교성을 감안해 행정 안목을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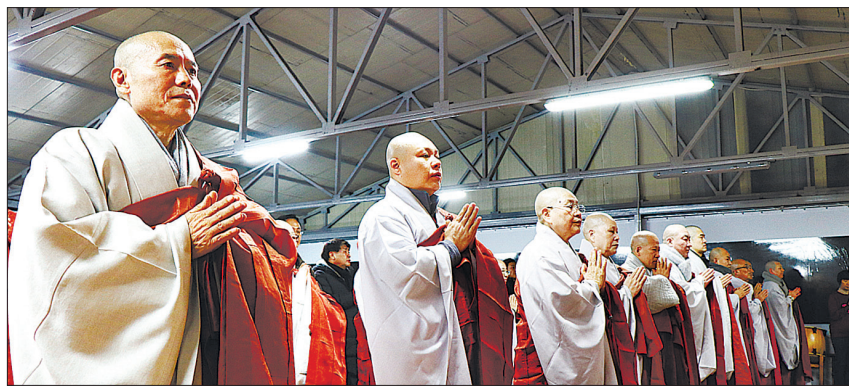
“천막결사 가르침대로 정진”

조계종 중앙종회, 상월선원 방문
종회의원 40여 명 정진 참여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위례 천막결사 상월선원에서 이뤄지는 9명 스님들의 정진 원만 회합을 지원하고 결사 정진 동참을 발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1월 18일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에서 용맹정진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과 수석부의장 장명 · 차석부의장 범원 스님을 비롯해 상임본과위원장 등온 · 만당 · 상덕 스님, 종회의원 선광 · 성행 · 태진 · 혜도 · 진명 스님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육성이 동국대 총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도 법회에 동참했다.

법회는 저녁에불과 반야심경 봉독, 고불문 낭독, 석가모니불 정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수석부의장 장명 스님은 법회 대중을 대표해 고불문을 낭독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인사말에서 힘 있는 정진을 당부했다. 스님은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모조로 원만 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왼쪽 첫 번째)을 비롯한 종회의원들이 상월선원 정진에 동참한 모습.

합되길 부처님 전에 기도드리며, 천막결사를 발원점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길 기원한다. 앞으로 천막결사의 가르침 그대로 게으름 없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참 종회의원 스님과 대중들의 결의 발언도 이어졌다. 차석부의장 범원 스님은 “20여 년 전 군법사 시절 이곳은 공수특전단 법당으로서 선배님이 법사로 활동해 도움을 드리러 자주 왔었다. 이제 강산이 두 번 변화해 신도시가 들어 서고 새로운 불사가 시작되려 한다”면서 “지금 아홉 스님들이 한국불교 변화를 위한 희망을 심고 있다. 중앙종회의

원으로서 한국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결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상월선원의 총도감이자 중앙종회의원인 해일 스님은 “현재 아홉 스님들의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고 내부상황을 전했다. 특히 동안거 결사가 약 70일이 지나며 스님들의 건강상태는 좋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전에는 한 스님이 의식을 잃는 긴급상황이 발생해 의료진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날 법회 대중들은 석가모니불 정근, 신묘장구대다라니 21송을 한 뒤 좌선에 들었다.

위례=신선민 기자

제주 관음사 주지후보
현 주지 허운 스님 추대

1월 21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주지후보로 현 주지 허운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관음사는 1월 21일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허운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운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허운 스님은 “지난 4년은 제주지역에 적응하는 시기였다. 또한 임기동안 관음사와 교구 발전을 위한 구상을 해왔다”며 “교구본사 위상 확립 등 생각해온 구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운 스님은 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5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총무원장 신도시포교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고, 2016년 3월부터 제주 관음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개금불사 모연문



삼보님전에 귀의하옵고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자리잡고 있는 동명불원은 고 강석진 회장의 원력으로 1977년에 창건되어 대웅전에 석가모니불, 제화갈라보살, 미륵보살 삼존불을 봉안하고 불자들의 청정한 기도·수행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경대상인 삼존불의 성상이 세월의 흐름속에 금분이 많이 탈색되었습니다. 이에 동명불원에서는 사부대중의 힘을 모아 삼존불에 새옷을 입혀드리는 개금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개금불사는 진리의 옷으로 부처님을 장엄하는 의식이며 부처님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공양입니다. 부처님의 무량공덕 가운데 개금하는 공덕보다 나은 공덕은 없습니다.

삼존불을 새롭게 장엄하는 개금불사 모연에 동참하시어 세세생생 복권이 될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충만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이 사장 박영근
(재)부산동명불원 주 지 승 찬 합장
신도회장 성재곤

(재)부산동명불원개금추진위원장 이재동

개금불사 모연 동참안내

• 문의/접수 : 종무소 051)626-4337, 624-7667

• 동참보시(은행구좌) : 부산은행 036-01-037861-9 (재)부산동명불원